

전남도,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혁신 창업 새시대 연다

오늘까지 순천서 ‘도전과 모험’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

비전 퍼포먼스·구글 스타트업 캠퍼스·학생 창업경진 등 다채

전남도는 지역 청년과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혁신 창업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7일까지 이틀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제1회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벤처·창업의 도전과 모험, 전남이 혁신을 스타트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6일 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 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대학 총장, 출연기관 대표, 벤처투자사(VC), 액셀

러레이터(AC) 등 관계자 30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창업의 비전과 열정을 공유했다.

행사는 도지사 개회사와 주요 내빈 축사, 벤처기업 유공자 표창, 비전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중·고·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예비창업자가 실전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페스티벌에서는 이외에도 창업 지원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전시, 상담, 투

자 연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 다.

도 부대행사로 기술이전(오픈노베이션), 1대1 전문가 멘토링, 기업 투자 상담회 등이 진행되고, 전사관과 부스 운영으로 벤처기업·대기업 상생협력존, 대학 창업허브센터·유관기관 기술창업 홍보관 등 참가자가 실질적 창업지원 정보와 투자 기회를 얻는 장으로 펼쳐진다.

특히 벤처창업기업 제품 홍보관에는 전남의 우수 스타트업 50여 기업이 참여해

기술력을 선보이고, 대기업과 활발한 현장 투자 매칭, 판로와 협업 가능성을 확대했다.

전남도는 또 로봇·우주·드론·해상풍력·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존’을 운영,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을 선보여 전남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혁신 창업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창업 전 주기에 걸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

서겠다”며 “특히 지난 5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이어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수퍼데이터센터, 반도체 팩토리 유치 등이 이뤄지면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벤처창업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기업·투자기관이 협력하는 창업 생태계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오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기 위해 묘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장동혁 “5·18 정신 계승…헌법전문 수록에 동의”

취임 후 첫 호남 방문…5·18묘지서 거센 반발에 묵념만

민주·조국혁신당 등 “내란 옹호 정당, 위선적인 정치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 제대로 참배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장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5·18민주묘지에 도착해 참배 공간으로 향하는 입구인 ‘민주의 문’에 도착했으나,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뿔뿔히 흩어져 출입을 막았다.

이날 장 대표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내란옹호 장동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 “사죄부터 하라”고 외치며 길

을 가로막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혼란 속에서도 장 대표 등은 항의를 뚫고 발걸음을 옮겨 추모탑 앞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지속된 시민단체의 반발에 현화와 분향은 하지 못했고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발길을 되돌렸다.

예초 장 대표는 묘역에 안장된 5·18민주화운동 열사들의 묘역도 찾아 개별 참배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현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정은 전면 취소됐다.

이날 장 대표들은 북구 광주종합소방물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묘역을 찾아서 민주화 영령들에게 헌화와 분향하고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 했지만 현장 상황이 여의지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췄다”며 “5·18 정신은 미래세대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 당 강령에도 5·18정신 계승이 명시돼 있고 그동안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지만, 아직 진정성이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월 1회 매달 호남을 방문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에 대해 “내란을 옹호

한 정당의 위선적인 정치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 자들이 전두환 내란에 맞서 싸운 5·18영령들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모독”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파산한 위헌 정당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정치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또 “5·18묘역 참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란죄주정당임을 인정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5·18영령과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을 자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5일 장동혁 대표의 5·18민주묘지 참배 계획에 대해 “5·18 정신을 훼손해 온 과거 언행에 대해 먼저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친환경 먹거리, 서울 학교급식 공급

전남 5개 생산자단체 선정…안전성 공급 기반 마련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이 서울시내 학교급식으로 들어간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시(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실시한 ‘서울시 학교(등·등)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양국 생산자단체 선정 공모’에서 지역 5개 생산자단체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전남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서울시 학교급식 시장에 향후 3년간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친환경농산물 공급망 확대를 위해 ‘도별 1개 공급업체’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로 5개 생산자단체를 선정하고, 광역지자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 10월 서류심사와 현장·경영평가를 거쳐 전남에서는 5개 업체가 선정됐다. 친환경농산물 분야는 나주시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유)(농)자연과농부들, 친환경양국 분야는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해남 인수영농조합법인, 영광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

선정된 전남 단체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쌀과 채소류 등 주요 식재료를 납품하며, 서울 지역 80만여명 학생에게 전남산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학교급식뿐 아니라 공공급식·복지시설 등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공급업체 선정은 전남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인정받은 결과”며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전남산 친환경 식재료가 대한민국 친환경 급식의 표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동원푸드, 한우 ‘9401만원’…역대 최고 낙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 한우

동원푸드가 운영하는 축산 도매 온라인 플랫폼인 동원푸드에 최고 등급의 한우를 9401만원에 낙찰받았다고 6일 밝혔다. 동원푸드는 전남 총북 음성에서 열린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15년 연속으로 대통령상 한우를 낙찰받았다. 1억원에 가까운 낙찰금액은 대회 사상 최고가다.

올해의 대통령상 한우는 1++A등급, 출하체중 911kg, 도축체중 553kg이다. 거래가는 kg당 17만원으로 올해 거래된 전체 한우 평균 경매가의 9배 이상이다. 동원푸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상(8위)을 수상한 한우도 약 3200만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한우는 1++A등급, 출하체중 883kg, 도축체중 561kg이며 거래가는 kg당 5만7649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축육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소의 근내지방도(마블링), 육색, 조직감 등과 사육환경, 방역시설, 위생요소 중점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원푸드는 낙찰받은 대통령상 한우를 축산 도매 온라인 플랫폼인 동원푸드에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면 ‘민주당 공천률’서 계속

12·3 내란저지 공로자와 5·18 유공자 등은 15%, 여성 25% 가점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해당자는 20% 감점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경력자는 공천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이 된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경력이면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이 기준이다.

단수공천은 후보자 간 공천심사 총점 차이가 4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를 통한 당선가능성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 제한했다.

전략공천은 시·도당 위원장이 전체 선거구의 10% 범위에서 중앙당에 의뢰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전남의 경우 22개 자치단체 중 2곳이 전략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파행

국힘 송언석·민주 이기헌 ‘배치기’ 몸싸움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 정회 후 퇴장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진 데 이어 오후에도 김 실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설전 속에 고성도 끊이지 않아 감사가 제자 중 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실장을 놓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박종권 의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경기동부연합과 교류,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연루, 인사

개입 등을 의혹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옛날에 다 끝난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 있다’, ‘잘못됐다’, ‘범죄자’라고 한다”며 “이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해 정치 감사를 동원해 모든 것을 다 하다 안 먹히니 김 실장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반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연성을 높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김현지 실장에게 김용의

체포영장을 보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다. 김 실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어본 적 있느냐”고 강 실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강 실장이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안 받았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직접 김현지에게 확인했느냐”고 거듭 물었고, 강 비서실장은 “김현지가 무슨 실체라고 거기 가서 확인하느냐. 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설전 직후 여야는 주 의원이 이날 국감 도중에 쓴 SNS 글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다 두 번째로 파행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에도 김 실장 출석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개의 59분 만에 파행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내년 3월 7일 5급 공무원·외교관 공채시험

7급은 7월 18일 예정

2026년도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내년 3월 7일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6일 발표했다.

5급 과학기술·행정 분야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일 시행하고, 합격자는 4월 10일 공개한다. 이후 6~7월에 2차 시험, 10월에 3차 시험을 차례로 치른다.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

측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국가 자격 시험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일정을 조정했다.

각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 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정보는 내년 1월 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등에 공고된다.

최종석 인사혁신처장은 “수험생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